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10월 중순 '첫 삽' 뜬다

공사 전 설치한 가림막에 5·18 10일간 항쟁 과정 재현
6개 동 원형 복원 통해 기억·전시·체험공간 등 조성
496억 투입 2025년 완공 예정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사업을 본격화하는 기공식이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21일 복원 대상인 옛 전남 도청 일대에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공사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 오는 10월 첫 삽을 뜬다.

2015년 11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원형 복원에 나선지 8년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추진단(복원추진단)은 오는 10월 중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기공식을 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원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복원공사를 착공 신고하고 도청 일대에 가설 시설물(가림막)을 설치 중이다. 가림막에는 5·18민주화운동 항쟁 과정을 담은 사진 프린트물을 붙이고 설명을 적었다.

복원추진단은 우선 바닥재를 걷어내는 간단한 작업을 진행하고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승인받는대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원 사업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전남도경찰국 본관·민원실 등 6개 동을 광주항쟁 당시인 1980년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이들 건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핵심 공간이다.

총사업비는 496억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14만480㎡, 대지면적은 8만 3004㎡이다.

건축 공사비로는 383억원이 투입되며 1980년대 마감재의 색상과 재질을 최대한 반영한 복원 작업이 이뤄진다. 단종된 마감재를 써야 하는 경우 당시와 비슷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공법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복원한다.

도청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 도청 회의실은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만큼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청 본관(9개), 경찰국(3개)에서 발견된 탄흔은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아크릴판으로 덮어놓고 작업하며, 완공 이후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청 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원형보존이 아닌 '제한 복원'을 하기로 했다. 도청 별관은 건물 좌측 24m 공간에 마련된 문화전당 출입구를 그대로 두고 별관 3~4층만 부분 복원해 'n'자 형태로 복원한다.

경찰국 본관은 노후화가 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 내 곳곳에 철골 구조물을 덧대고 이에 맞춰 층고를 낮췄는데,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고려해 철골 구조물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청 본관과 경찰국 본관 사이에 있는 방문자센터, 경찰국 본관 뒷면에 조성된 '미디어 월'은 기존에 없던 시설물로 모두 철거한다. '미디어 월'은 내년 하반기에 철거한 뒤 다른 위치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시콘텐츠 제작 사업에는 113억원을 투입하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전시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해체·재시공 등 공사는 총 22개월 동안 이뤄져 오는 2025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하반기까지 전시 콘텐츠를 채워넣는 작업까지 마친 후 개관할 계획이다.

복원추진단 관계자는 "광주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옛 전남도청 모습을 1980년 5월 그 당시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지휘부가 있던 곳으로, 5월 27일 새벽까지 시민군들이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최후 항전하다 숨진 공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18일 5·18 기념식에서 복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파트 173채로 102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2명 실형 선고

자신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73채를 구매해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조현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시 등지에 있는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B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매수해 보증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경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동산을 매입하기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자기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를 한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세입자에게 임대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되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활동 종료 3개월 남은 5·18진상조사위 내홍

전원위원회, 부위원장 사직 권고
최종보고서 작성 등 차질 우려

활동 종료 시점을 불과 3개월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내홍을 겪고 있다.

21일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조사위 제94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종철 부위원장에 대한 사무처장직 사직 권고안이 의결됐다.

4년 동안의 조사 성과가 미진한 점, '청문회 10월 개최설 번복' 등 조사위 안팎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무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해 4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사직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안 부위원장은 "5·18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에 모든 비판을 받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활동 종료를 3개월 남긴 시점에서 남은 조사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대안도 없이 집행부를 흔들어서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10월 청문회 개최설 번복'으로, 조사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꼽혔다.

지난달 21일 조사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내부에서 오는 10월께 청문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청문회와 관련해 전원위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고,구체적인 준비는커녕 수개월 동안 청문소위원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8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이 드러났다.

결국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월 청문회 개최 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원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 보도돼 국민과 조사위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관들의 잇단 사퇴로 최종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사위에서는 올해만 13명이 잇따라 퇴사해 네 차례 채용공고를 올렸다. 퇴사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4명, 2022년 11명에 이어 올해 13명 등 4년 동안 총 30명에 이른다.

잦은 인사 변동 때문에 조사위는 지난 6월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어느 위원회나 임기 말기가 되면 직원들이 근무 기간이 보장된 지방의회 의정연구관, 국회 보좌관 등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라며 "각 조사과의 과장, 팀장 등이 남아 통제를 하고 있으니 업무 차질이나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혼수상태 남친 재산 노리고 혼인신고서 위조한 여성 징역형

혼수상태인 남자 친구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 친구 B(63)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모친의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8월 3일 B씨의 동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씨의 도장을 날인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혼인 신고서 부모란에 B씨 모친의 서명과 도장까지 날인했다. B씨는 8월 13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8월 24일 B씨 모친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동차 상속포기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를 B씨의 상속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봤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서 "혼인신고라도 하면 혼수상태인 B씨가 힘을 내서 나을까 싶어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둔 A씨가 평생 미혼이었던 B씨와 결혼식 등 혼인과 관련한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지 않은 점, B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점이 없는 점, B씨가 A씨 가족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회 관념상 부부인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혼인신고 일주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B씨의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하라는 안내도 들었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B씨는 혼수상태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점을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B씨가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